美, 북핵시설 선제공격 가능할까

■ 외신들 잇따라 '비상계획'설 보도

"한국군 빠진 태평양사령부만으로도 충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는 선제공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가 지난달 27일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키로 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워싱턴 타임스가 미측이 북한 핵시설 공격을 위한 비상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WMD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 단독공격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결심'만 있으면 즉각 작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도 4일 미국이 대북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신문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북한의 핵실험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건설중으로 알려진 흑연감속로가 가동되면 북한의 핵제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과 한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원자로가 가동되기 전 미국은 유일의 의미있는 강제수단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측 참석자인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대북압력 강화가 필요함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제재하는 방향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카가와 후쿠시로 일본 전 방위청장관은 자국의 헌법해석을 통해 행사가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북한이 무력행사를 단행, 일본으로 날아온 노동미사일을 미국 함대가 요격할 때 일본의 이지스함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대포동 2호를 헌법문제를 이유로 방관하는 일은 있어서 되겠는가"라며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연합사 해체와 함께 '작전계획 5027'이 폐기되더라도 태평양사령부의 '5000계열'의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유사시 한반도에서 단독작전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작전구역인 한반도의 전쟁에 대비해 작계 5026, 5028, 5030 등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들 작계로 단독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작계 5026은 핵시설을 타격할 목적으로, 5028은 우발사건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 수립된 계획이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핵시설 선제타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90년대 초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핵시설 선제타격 계획이 부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이 보도되는 것은 심리전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7美 중간선거 ⓗ 막판 판세

세금인하 등 경제공방속 민주 우세 지속

미국 중간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공화, 민주 양당은 4일(현지 시각) 지도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이라크전과 경제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마지막 표심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최대 쟁점인 이라크전에서 수세에 몰린 공화당측은 경제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불리한 선거분위기를 반전시키려 나섰으나 미 군사전문지들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재하는 등 공화당측에 악재는 계속됐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풍자한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지난 4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 알렌의 선거 운동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부시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4일 실시한 마지막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이라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임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콜로라도주 등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도 '민주당은 세금 인상당'이라고 공격하며, 자신은 세금 인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 경제 활성화 강조

민주당측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접전지구인 플로리다를 누비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이날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할 계획이라는 응답자의 54%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데 비해 공화당 후보 지지자는 38%에 그쳐 민주당의 우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위크가 프린스턴대 조사팀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지지후보 결정에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이라크(3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19%), 테러리즘(12%), 건강보험(11%), 이민(10%), 낙태(5%), 줄기세포(3%) 순이라고 밝혔다.

민주 하원 장악 가능성 커

한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에서 50대50 동석을 이룰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패배한 조 리버맨 의원을 잡기 위한 공화, 민주 양당의 구애작전이 치열하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7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의원(임기 6년) 100명 가운데 3분의 1인 33명, 하원의원(임기 2년) 435명 전원, 주지사 36명을 선출한다. 〈끝〉

/워싱턴=연합뉴스

"정식회담 이달말이나 내달초 유력"

한·미·일 6자 수석대표 주말께 회동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빠르면 주말께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5일 "지난달 31일 베이징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가 결정된 이후 한미일 3국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일정을 조율한 결과 이르면 주말이나 내주초에 워싱턴에서 회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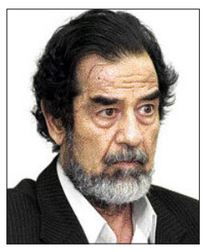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함께 우리측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측에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가하는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6자회담 전략이 집중 숙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해야할 단계적 조치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사전조치'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3국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에서는 또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비공식 6자회담 개최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현재로선 외교일정을 감안할 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전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이후에도 비공식 회담을 가질만한 여유가 사실상 없다"면서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가지 외교일정을 종합해볼 때 정식 6자회담은 이달말이나 12월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사담 후세인에 사형 선고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주민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된 사담 후세인 〈사진〉 전 이라크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두자일 사건을 맡은 이라크 고등법원은 5일 바그다드 그린존 내의 특별법정에서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후세인이 1982년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 사건이 있었던 두자일 주민 148명을 체포해 고문하고 학살한 혐의를 인정해 사형(교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처형재판을 주도했던 아와드 알-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에게도 사형(교수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초 사형이 구형됐던 타하 야신 라마단 전 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후세인 전 대통령은 사형판결이 내려지자 몸을 떨면서 "신은 위대하다(알라후 아크바르)" "이라크 만세"를 외쳤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후세인은 판결 직후에 법정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의원실은 넓어졌지만

정후식
정치부 차장

전남도의회가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지 1년이 됐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천393평의 최첨단을 자랑하는 새 의회 건물은 구 청사에 비하면 쾌적하기 그지없다. 전남도청과 의회 건물은 13%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 평당 641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지었다 하여 '호화청사'라는 비난이 일 정도였다.

새 의회 건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51명의 의원 개개인에게 사무실을 하나씩 배정했다는 점이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의 옛 건물은 공간이 협소해 의원들은 인근 빌딩을 임대, 3명당 사무실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더욱이 의회 건물과 떨어져 있어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새 건물에는 별도의 공간이 확보된 의장단 3명을 제외한 의원 48명의 사무실이 5층과 6층에 반반씩 배치돼 있다. 9평 크기의 각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와 안락의자 4개가 들어가 있다. 도정시책에 대한 모니터와 자료 수집, 독서는 물론 지역에서 찾아온 민원인들을 만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다.

이처럼 개별 의원 사무실이 마련된 것은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활용도는 어떨까. 의회가 열리는 연간 회기(120일) 중에는 당연히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지만 비회기중에는 5~8명, 많아야 10명 정도가 이용하는 추세다. 전체 의원의 20%에도 못미친다. 지난 1~2일 의원실을 찾은 의원은 각 6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의원들은 상당수가 지역구에 머문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개별 의원 사무실이 있는 곳은 전남을 포함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부산, 전북 등 7곳 정도다. 전남보다 재정 형편이 나은 지역도 아직까지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비단 사무실만이 문제는 아니다. 제 8대 전남도의회의 전남도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 도정 질의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여간 예정돼 있다. 이를 불과 보름 앞두고 전체 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명이 두 팀으로 나눠 해외로 떠났다. '북유럽 6개국 해외연수'와 '우즈베키스탄 세종한글학교 초청 방문'이 그 것이다. 목적은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파악과 의회간 교류, 관광문화산업 진흥 및 친환경농업 지원실태 점검 등이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여전히 유명지 관광이 절반 이상이다.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일하는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여 진정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저버린 채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지방의회 역시 개혁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who@kwangju.co.kr